

8강 - 학생 체벌의 정당성

■ 핵심용어(용어사전)

- *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 * 고의 :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
- * 과실 :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
- * 미필적 고의 :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감행하는 심리상태
- * 인식 있는 과실 : 그러한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만 자기의 능력 등으로 그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믿은 경우
- * 책임능력 : 자기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 즉 그 결과가 위법한 것이어서 법률상 비난 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
- * 인과관계 :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귀속시키는데 필요로 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

■ 사례1 :

<사건의 개요>

고등학교 여교사 A 는 2009. 6. 1. 1학년 학생 B가 수업에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와우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달 26.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앞으로 불러내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로 B의 양손을 때렸으며,

같은달 28. B가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로 B의 엉덩이를 20대 때려서 약21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둔부고도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에 B의 부모가 A를 상해죄 및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여교사 A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징계행위로서 정당한 체벌이었다고 주장하였다. A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쟁점은 교사의 체벌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사건의 결말>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다. 그런

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바,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 A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당시의 상황, 동기, 그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전문가의 의견>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낮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학습>

1. “징계”와 “지도”의 구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징계”의 수단으로서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의 이수, 퇴학처분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이외의 “지도”로서 교육상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도는 원칙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교육상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할 수 있지만 징계수단이 아닌 지도의 수단으로 들고 있다.

2. 체벌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신체적고통을 가하는 지도이거나 신체적고통을 가하지 않는 지도이거나 학교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학생에게 체벌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정당행위 판단 기준(체벌의 위법성판단기준)

심한 체벌은 대상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격권 내지 인격성장의 권리에 손상을 가져 올 수 있다. 다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체벌은 체벌대상 학생에게도 학습의 효과를 높

여주고, 질서가 유지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가능성이 있다.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위에 본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행해야 한다. 물론 학생생활규정만이 체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가 이를 무시하고 직무상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멋대로 체벌을 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교육관련 법령에서 체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지도방법으로 정하였고 학생생활규정은 이를 구체화하였으며, 학교는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기본적인 장소이므로 교사가 먼저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의 학생들은 교육을 통하여 인격을 형성하여 가는 과정에 있는데, 정신적 신체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행동을 절제하기 어려운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다. 사회환경이 급변하면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개성과 자유를 중시하며 기존의 가치관념으로 분류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교사들이 관심영역과 개성이 다른 많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적절한 교육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체벌로 쉽게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또 벌받을 만한 행동이 반드시 맞을 짓은 아니며, 진정한 벌이나 지도란 학생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칫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체벌보다 학생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일깨우고 민주적 가치와 인권의식을 체화시키는 대안적 훈육방법, 효과적인 학급경영기법 및 학생지도능력을 강화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로 교육담당자의 직무인 것이다.

학교체벌이 사회적 상당성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좁다고 해야 할 것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현행 교육관련 법령 아래서 사회통념상 체벌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훈육이나 훈계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체벌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사의 성격에서 비롯되거나 감정을 내세워 행해지는 폭력행위는 교육상 필요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다른 대체수단으로 지도할 수 있음에도 체벌을 하는 경우에는 체벌의 불가피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둘째, 체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체벌 전에 학생에게 체벌의 목적을 알리고 훈계하여 변명과 반성의 기회를 주고, 신체의 이상 유무를 살핀 후 시행해야 한다. 만약 학칙에서 정한 체벌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셋째, 방법이 적정해야 한다.

체벌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체벌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위험한 도구나 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벌의 장소는 가능한 한 비공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야 한다. 체벌 부위는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은 둔부 등이어야 한다.

넷째,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의 성별·연령·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고, 특히 건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4. 체벌절차

가. 징계는 어느 한 교사 개인이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 다수의 교사들로 조직된 학생선도위원회의 의논과 학부모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적절한 징계절차를 통해서 최종 결재권자인 교장의 재가가 필요하며 징계권은 위임이나 대리될 수 없다.

나. 체벌은 징계보다는 가벼운 사안에 대해 행해지며 사전적 경고와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체벌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원칙적으로 학교장에게 사전보고를 할 것과 체벌 전에 학생의 상태 점검 등이 요구된다.

징계권은 위임할 수 없지만, ‘지도’의 자격은 일선 교사에게 위임될 수밖에 없으며 교사의 체벌 행사를 인정한 현재의 판례도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사가 학생을 체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사례2 :

<사건의 개요>

중학교 3학년1반 담임교사 C는 2008.9.8. 12:00경 3학년 1반 학생들에게 그해 12월경에 시행될 예정인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대비하여 토요일이지만 오후에 자율학습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D를 비롯한 10여명의 학생이 인근에 있는 학교운동회를 보러 갔다오는 등 무단외출한 사실을 알고서 이들의 무성의한 학습태도를 시정하기 위하여 같은날 14:00경 위 중학교 정구장에 위 학생들을 모아 엮드려 뺨치기를 시켜 놓고 나무막대기(길이 약50센티미터 두께 약 2센티미터)로 학생들의 엉덩이와 머리등을 때리고 발로 발바닥을 차며 감독을 하던 중 D가 웃어버리자 나무막대기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찼다. 당시 D는 머리가 멍하고 아픈 정도이었으나 크게 다친 줄 모르고 귀가하였다가 저녁식사 후 머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갑자기 토하면서 실신함으로써 입원하여 진단하여 본 결과 뇌좌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되어 응급개두술을 받았다.

이에 D 및 D의 부모는 C의 행위는 징계목적을 넘는 체벌로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면서 C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D의 청구는 정당한가요?

<이 사건의 쟁점>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행위가 사회관념상 비난받을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 교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려보기 위하여서는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체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및 체벌을 가한 신체부위와 그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벌을 가하는 교사로서의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의 결말>

D가 C의 행위로 인하여 6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급성경막하혈종, 좌측편마비, 좌측안면신경마비 등의 상처를 입고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후유장애가 남아 일반노동능력의 약70퍼센트를 상실한 사실 및 C가 위 D의머리를 막대기로 여러 번 때리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구둑발로 머리를 여러 번 찬 사실까지 종합하여 볼 때 C가 D에 대하여 특히 중한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가 D가 다른 학생10여명과 함께 단체로 체벌을 받고 있던 중 갑자

기 웃어버린데 있다면 D의 진지하지 못한 태도와 함께 C가 자신의 인격이 무시당하였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면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 C가 체벌을 가한 부위가 다리, 둔부 등의 비교적 안전한 부분이 아니라 신체부분 중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머리부분으로서 그 상처의 종류와 정도가 통상 외부로부터 상당히 강력한 힘이 가하여 질 경우에 발생하는 성질의 것이며 더우기 체벌을 가한방법이 막대기만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구둣발로 여러 번 차는 등 심히 비인격적, 비교육적인 방법에 까지 이르고 있음을 알수 있다.

실사 위 사고가 C의 직무의 연장으로서 교육상 학생지도의 징계목적으로 10여명의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위 체벌 당시에는 위 D가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C로서는 개인적인 감정의 개입을 억제하여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체벌을 가하는 신체부위와 그 정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징계의 목적으로 체벌을 가하는 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함으로써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다리, 둔부 등 안전한 부위를 골라서 체벌을 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자기의 지시에 불응하자 격한 감정에서 학생을 때리거나 비록 교사의 체벌이 교육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만 체벌행위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교육업무상의 정당한 행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본 학습>

1. 판례에 나타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의 정당성 판단 기준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①체벌의 목적, ②체벌의 정도, ③체벌의 방법, ④체벌의 부위, ⑤체벌의 도구, ⑥체벌의 결과, ⑦체벌 전 사전조치, ⑧체벌 전 교사의 상태, ⑨학생이 징계대상인지 여부, ⑩보충성 등이었다. 이 중 주로 사용된 기준은 ①체벌의 목적, ②체벌의 정도, ③체벌의 방법이었다.

2. 대법원 판례에서 교사의 중과실여부 판단기준

가. ①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 체벌을 가하는 방법(도구)과 정도(상해여부)

③ 체벌을 가한 신체부위

④ 그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⑤ 교사로서의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체벌은 폭력의 성격이 있다. 따라서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판례는 “교실 내에서 다수 학생들을 상대로 교실내의 규율을 바로 잡으면서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시켜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교육 업무상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긴 하나, “피고가 자신의 인격이 무시당하였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면에도 기인”하는 경우와 “지시에 불응하자 격한 감정에서”의 체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벌은 훈육의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체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대법원 재판부는 “타일러 칠판에 손을 대고 엎드리게 하는 등의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체벌을 가하거나 위 원고가 서있는 자세에서 체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다리, 둔부 등 안전한 부위를 골라서 체벌을 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안전한 상태에서 체벌을 하여야 한다.

판례는 “체벌을 가한 방법이 막대기만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구둣발로 여러 번 차는 등 심히 비인격적, 비교육적인 방법에까지 이르고 있음”이나 “격한 감정에서 대걸레자루를 높이 치켜들고 위 원고를 때리려고 휘두르다가” 등은 불법행위로 삼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를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 한 다음 길이 50센티미터, 직경 3센티미터 가량 되는 나무 지휘봉으로” 체벌한 것도 방법과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생이라는 어린 학생에 대한 체벌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쳤다는 것을 말한다. 체벌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아리를 안정된 자세에서 체벌하는 식의 주의가 필요하다.

라. 체벌을 가한 신체 부위

신체부위 중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머리부분을 막대기와 구둣발로 구타한 경우와 어깨와 팔, 머리 등을 대걸레 자루로 구타하여 학생에게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긴 경우, 허리 부분을 때려서 상해를 입힌 이와 같은 체벌의 신체부위는 위법 기준에 해당된다.

마.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판례에 따르면 상해의 정도가 심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평소 내포하고 있던 정신질환이 악화되었다는 경우 이를 사전에 교사들이 알 수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있다.

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판례에 의하면 “개인적인 감정의 개입을 억제하여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체벌을 가하는 신체부위와 그 정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 상해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체벌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3. 체벌관련 가이드라인

대 법 원	기 준	교육인적자원부
- 다른 사람이 없는 별도 장소	체벌장소	- 다른사람이 없는 별도장소 - 제3자(교감 등)동반
- 도구가 학생의 신체에 비해 너무 크지 않아야 함 -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협한 물건은 피할 것	체벌도구	- 초등학생 : 지름 1cm내외 길이 50cm 이하의 나무 - 중·고교생 : 지름 1.5cm내외 길이 60cm이하의 나무
- 학생이 안정된 자세를 취하도록 할 것 -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모욕감을 주지 않도록 할 것. - 학생에게 체벌의 교육적 의미 고지	체벌부위 및 교사의 유의사항	- 남학생 : 둔부 - 여학생 : 넓적다리로 제한
	체벌봉 사용횟수	- 초등 : 1차례 5회 이내 - 중등 : 1차례 10회 이내

4. 일선학교의 학칙규정

학교생활 규정(또는 “학생생활규정”이라고 함)의 제정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또는 시·도교육청)의 예시 안을 토대로 해당 학교의 사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개정된다. 학교생활 규정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입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6월 제정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체벌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교사의 체벌권과 학생의 체벌 허용기준을 고찰해 보고자 교육인적자원부의 체벌규정을 토대로 제정한 가장 구체적 (하위)규정인 일선학교의 체벌규정(초·중·고등학교의 생활 규제규정 부록 참조)을 요약해 보면, 체벌도구와 횟수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 길이 50cm, 지름 1cm 회초리를 5대 이하만 사용할 것’이며, 회초리에 대해서도 ‘돌출부나 모서리가 없는 원통형으로 한하고, 체벌부위도 손바닥·종아리·옷을 입은 채의 엉덩이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체벌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상담실·교무실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밖에 지역에 따라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되 피할 수 없다면 체벌기록부에 학생 의견을 반드시 적도록’ 한다거나, 학생들이 체벌을 수용할 뜻을 밝혀야만 체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규정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체벌을 가하기 전에 교장이나 교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도 있어 체벌규정을 만드는 것은 체벌을 합리화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정리하기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형식과 내용 및 절차가 엄격히 정해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하며, 교사가 이를 무시하고 직무상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멋대로 체벌을 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교육관련 법령에서 체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지도방법으로 정하였고, 학교는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기본적인 장소이므로 교사가 먼저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적절한 교육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체벌로 쉽게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체벌은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1)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 (4)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5)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6) 본교에서 운영하는 벌점규정에 의하여 벌점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평가하기

문제 1. 교사의 체벌행위와 관련한 법령 및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다.

(2)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된다.

(3)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4)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므로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도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해설 : 정답(4)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 2. 판례에 의할 경우 체벌시 교사의 중과실여부를 판단기준으로서 틀린 것은?

(1)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는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라야 한다.

(2) 체벌을 가하는 방법 및 도구가 적절해야 하며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3) 체벌을 가한 신체부위가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모욕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학생에게 체벌의 교육적 의미 고지할 필요까지는 없다.

해설 : 정답 (4)

학생에게 체벌의 교육적 의미 고지해야 한다.

문제 3. 일선학교의 학교생활 규정 중 교사의 체벌권과 학생의 체벌 허용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체벌도구와 횟수는 불가피한 경우 길이 50cm, 지름 1cm 회초리를 5대 이하만 사용한다.

(2) 회초리는 돌출부나 모서리가 없는 원통형으로 한한다.

(3) 체벌부위는 손바닥·종아리·옷을 입은 채의 엉덩이로 한정한다.

(4) 체벌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즉시 제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장소를 불문한다.

해설 : 정답 (4)

체벌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상담실·교무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